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박영택*

■ 국문요약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현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 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 대진대학교 교수, E-mail: ytpark60@daejin.ac.kr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 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3대 중요사업, 해원상생, 통일유형, UNHCR, 통일 전문 인력

- I. 서론
- II. 통일시기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현황 및 의의와 이론적 고찰
- III. 통일유형별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 IV. 통일 시기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 V. 결론

I. 서론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은 종단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공신력을 높여 덕화선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바 구호자선,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사업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종단 연간 예산의 70%를 책정하여 국내외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을 통일시기로 확장하여 다양한 통일유형에서의 상황과 여건을 가정하여 가용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유형은 미래 상황으로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한반도 상황에 부합한 연구 분석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6·25전쟁과 분쟁국 사례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한반도 통일유형은 3가지로 요약되는데 독일의 평화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예멘의 합의 및 무력통일 반복과정을 거친 급변사태 통일 등이다.

‘<표 1> 통일유형과 상황 개요’는 3개 통일유형의 통일과정과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을 개관한 내용이다. 평화통일은 남북 양측이 합의하여 전쟁 없이 통일을 달성하는바,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하다. 급변사태 후 통일은 김정은 정권이 쿠데타와 변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붕괴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남한주도의 통일을 추진되는데, 외세의 개입과 혼란이 수반될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무력통일은 남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상당한 갈등이 잔존한 가운데 물리적 통일이 이루어져 후유증이 매우 클 것이다. 각각의 통일유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북한지역의 붕괴 정도, 난민의 발생 빈도,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경제적 후유증, 남북한 주민 간 갈등 등의 요소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위 문제를 근거로 통일사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통일의 선호도는 평화통일 > 급변사태 후 통일 > 무력통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3대 중요사업 관점에서 보면 3개의 통일 유형별로 요구되는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표 1> 통일유형과 상황 개요

통일 유형	통일과정	북한 지역 상황 여건
평화통일	① 전쟁방지 등 합의 → ② 정치적 통일(흡수)	- 남북 격차 해소에 막대한 예산 소요 - 구호자선/복지 사업 장기간 유지 필요 - 북한 주민의 동화교육 소요 다대
급변사태 후 통일	① 북한수뇌부 붕괴 → ② 군부 무력저항 → ③ 안정화/통일	- 무력충돌 후유증 심각, 자원 절대 부족 - 긴급 구호/복지 조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동화교육 소요 다대
무력통일	① 전쟁 → ② 일방에 의한 무력통일	- 북한지역 인프라 붕괴, 난민 대담 유입 - 복구 및 후유증 회복에 장기간 소요 - 북한 주민의 동화교육 소요 다대

한편, <표 1>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빈국이며, 1인 독재 치하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성분에 의한 차별로 극빈층 중의 극빈층이 존재하는 정권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국력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적으로 이질화가 심각하며 동(질)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는 통일 시기 3대 중요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전제가 되는 바, 충분한 사전준비, 전문 인력 확보, 가용한 자원의 준비 등이 요구될 것이다.

통일시기 북한지역에서 3대 중요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가? 통일은 천지공사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해원상생의 덕목과 일맥상통하는 과정이라고 사료된다.¹⁾ 3대 중요사업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북한지역에서 연명의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의 국민이 모두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 날 중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²⁾

북한지역은 통일과 동시에 수복지역이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로,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 된다. 통일 이후 빈곤하고 열악한 북한의 경제·사회·문화·교육 상태와 선전선동에 찌들어 크게 위축된 북한 주민에 대한 3대 중요사업의 추진은 당위적이고 매우 시급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당위성을 전제로 통일 시기 유형별로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전제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1) 『전경』의 “이제는 인존시대라.”(교법 2장 56절), “지금은 해원시대니라.”(교법 1장 9절, 교법 2장 20절, 공사 1장 32절),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교운 1장 20절),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교운 1장 32절, 교법 1장 67절, 교법 2장 14절, 교법 3장 15절, 예시 74절) 참조.

2) 『전경』, 공사 1장 11절.

II. 통일시기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현황 및 의의와 이론적 고찰

1. 3대 중요사업 추진 현황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은 포덕·교화·수도공부와 더불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는바,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종단의 발전과 사회적 공신력 확보 및 덕화선양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연간예산의 70%를 활용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첫째, 구호자선사업은 ‘<표 2> 3대 중요사업 주요내용’에서와 같이 국민총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이재민구호, 불우이웃돕기(고아·병자·노약자·빈민)등의 구제사업, 소외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구호자선 및 재활지원과 상호회의 조직을 통한 구제, 무직자 취로 알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사회복지 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헌신봉사와 공동복지 도모, 무료예식장 개설·운영, 새마을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계도, 부인회·청년회 조직·운영, 양로원·고아원·병원 등 시설사업 확대 추진, 투철한 반공정신과 국가방위에 성심·진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사업은 참된 인간교육을 지향하는바,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 전반을 포괄한다. 주요 내용은 영재 등 동량 육성, 장학금 제도 확대 실시,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양성 주력, 민족주체사상이 투철하고 애국애족하는 공민육성 주력, 전인교육을 통한 국민윤리도덕과 준법정신을 함양, 자녀교육 충실 등이다.³⁾

3) 『대순지침』, pp.97-104; 박종수,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표 2> 3대 중요사업 주요 내용

구분	목적	주요 내용
구호자선사업	국민총화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 - 불우이웃돕기 - 재활지원 - 소외된 사람 구제 - 무직자 취로 알선
사회복지사업	국민 복지증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공동복리 도모 - 무료예식장 개설/운영 - 새마을사업 추진/계도 - 부인회·청년회 조직 사회봉사 선도 - 양로원·고아원·병원 설립/운영 - 반공정신 下 국가방위에 성심 전력
교육사업	참된 인간교육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정·사회 교육 전반 추진 - 장학금 지불, 영재교육 등 동량 육성 - 고등교육과 전문교육 등 인재 양성 - 민족주체사상과 애국애족 겸비한 공민 육성 - 전인교육 下 국민윤리도덕과 준법정신 함양 - 자녀교육 충실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한 계획 하에 중단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3대 중요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사회에 환원한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구호자선사업에 90억여 원(1.5%), 사회복지사업에 3,536억여 원(58.8%), 교육사업에 2,387억여 원(39.7%) 등 총 6,013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첫째, 구호자선사업은 1980년 이후 대순청년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신체장애인 돕기·소외계층 어린이지원, 저소득층 연탄지원·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찬 배달·도배·장판 교체 및 집수리,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유 및 의료품 지원, 수해지역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수재민 돕기 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해외에서도 그 사업을 확장한바, 2009년의 케냐 및 에티오피아에서 우물과 기와 구호품 전달 등 해외구호자선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을 발족하여 몽골, 베트남 등지의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은 복지사업과 의료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복지사업은 1975년 이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대민봉사, 노인요양시설(2007년)·노인전문병원(2009년)·청소년수련원(2013년) 건립 및 운영, 그리고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의료사업은 1998년 분당제생병원을 개원한 이후 고성제생병원 및 동두천제생병원의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사업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산하에 대진대학교(1992년)와 대진고(1985년)·대진여고(1989년)·분당대진고(1994년)·대진디자인고(1994년)·일산대진고(1995년)·대진전자통신고(1996년) 등 6개의 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또한 대진대학교는 중국의 하얼빈과 쑤저우에 캠퍼스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중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대학교·서안창신대학·무한공상대학 등과도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⁴⁾

2. 통일시기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의의

1) 해원상생의 실천: 유엔현장의 핵심이념과 일맥상통

통일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6·25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과 생존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극복하기 쉽지 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복구 및 재건하는데 있어서 해원상생의 뜻이 전제되어야 그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 해원상생사상은 보은상생과 더불어 『대순진리회요람』과 『전경』 등에서 보여주는 핵심사상이자 교리로서 원한을 풀고 상극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평화사상의 정수임을 알 수 있다.⁵⁾ 또한 이 타적 자שה와 선한 본성의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유교, 불교, 기독교와

4)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종단사업」 참조.
(http://www.daesoon.org/business/main.biz_1.php, 검색일: 2021년 8월 15일).

5) 『전경』, 공사 1장 7절, 공사 2장 3절·4절, 공사 3장 6절, 교법 1장 2절, 권지 1장 11절, 예시 14절·25절·50절 등 참조.

우리의 전통사상을 포괄한다.⁶⁾ 또한 통일은 ‘해원 보은의 도리로 원율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는’ 대순의 진리를 통하여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도 북한을 구제하는 논리의 당위성에 부합한다.

...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겁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 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대도의 진리로써 신인의도의 이법으로 해원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보은으로 종결하시니 해원 보은 양원리인 도리로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율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대순하신 진리인 것이다.⁷⁾

한편,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평화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평화사상에 대해서는 “우리 대순진리의 인존사상이 바로 평화사상이다. 인류의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덕으로 밍고 고움이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道)의 무한대한 진리에 있음을 이해하라. 가정화목·사회화합·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⁸⁾라고 『대순지침』에 강조되어 있다. 해원상생이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실천적 가치가 있는 사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인간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인간본성의 구현에 대한 사명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과멸을 예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중심사상이 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모든 질서의 전제조건이며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국가들은 자국민 위주의 사고에 몰입되어 있으며, 타국민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것에 인색하다. 해원상생사상은 이러한 잘못된 세계 질서 하에서도 인간존중의 3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 이향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pp.4-15.

7) 『대순진리회요람』, p.8.

8) 『대순지침』, p.20.

김 형렬이 어느 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정(鄭) 집전이라 하는 사람은 지식이 신기한 사람이외다. 저의 증조가 계실 때에 저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나이다. 동리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앞에 두고 걱정하였는데 이 걱정을 알고 금광을 가리켜 주어서 고생을 면케 하였으며 많은 영삼(靈蔘)을 캐어 병든 사람을 구제하였고 지난 임술(壬戌)년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민란을 미리 말하였나이다. 저의 증조께서 그의 지식을 빌어 명당 하나라도 얻어서 그 여음을 후세에 끼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저의 한이 되는 일로소이다」고 여쭙는지라. 듣고만 계시던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런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찌 남인 너의 집의 밥을 헛되게 먹으리오.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만한 인옥의 사가 없나니라」 하셨도다.9)

<표 3> 인존사상과 유엔헌장 비교

구분	인존사상	유엔헌장 서문 ¹⁰⁾
인류평화 원리	이해와 사랑	전쟁의 불행 방지, 인권과 인간존엄 가치
	인보상조의 미덕	의무에 대한 존중 유지
	밋고 고음 없는 너그러움	남녀 / 대소 각국의 평등권
	도의 무한대한 진리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 촉진
세계평화 실천	가정화목	관용실천, 상호 간 평화 존중
	사회화합	공동이익 외 무력사용 금지
	인류화평	평화와 안전 위한 협력

또한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표 3> 인존사상과 유엔헌장 비교’에서와 같이 인류평화원리와 세계평화 실천의 핵심 명제 측면에서 유엔헌장의 서문(preamble)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존사상은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원리로서 인류평화를 위하여 이해와 사랑, 인보상조의 미덕, 밋고 고음 없는 너그러움, 도의 무한대함을 지향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이 되어 실천할 도리를 밝혀주고 있다. 유엔헌장에서도 인권과 인간존엄 남녀와 강·약국을 가리지 않는 평등권을

9) 『전경』, 행록 2장 17절.

10) United Nations, “UN Charter: Preamble,”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preamble>, 검색일: 2021년 8월 10일).

같은 맥락에서 지향하고 전쟁의 재발방지와 사회발전과 인류의 생존권을 강조함으로써 각각의 국제기구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인존사상은 화목과 화평의 실천 목표를 가정, 사회, 그리고 인류로 확장함으로써 어느 시점, 어느 지역이든 인존이 도(道)로써 시공간에서 그 한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엔현장은 관용과 평화존중을 강조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무력사용 금지와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직급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는 와중이지만 유엔 주도 하에 각종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유엔현장임을 고려할 때 인존사상에 기반한 3대 중요사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에도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지역 경제회복의 시급성과 통일 한국 건설 선도

북한의 경제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 군사국가 유지 및 핵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1인 독재체제의 통치경제 형성, 자연재해 빈발로 만성적 식량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경제가 붕괴되어 세계의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으며,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결구도에 몰입되어 ‘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경제핵병진노선을 앞세워 핵무장을 지속함으로써 경제는 더욱 피폐해진 상태다. <표 4> 북한경제의 붕괴 요인’은 북한경제의 붕괴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개관해보면 북한경제의 붕괴원인은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되는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하고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적 경제체제를 고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¹⁾

11)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24-2 (2015).

<표 4> 북한경제의 붕괴 요인

주요 요인	내용
사회주의 경제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 - 중앙집권적 경제정책 -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46년) - 산업의 국유화/상공업의 협동화('46년)
1인 독재체제의 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적 통치경제의 등장 - 성분 계층 간 격차 심화 - Top-down식 경제정책의 부실
군사국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군사노선 건설, 인민경제 위축 - 국제적 경제 경쟁력 실추 - 선군경제노선의 폐해 심각
핵개발과 핵무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개발 및 유지 비용 투입 - 국제적 고립 및 제재 자초 - 남북관계 진전 불가
對中 의존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냉전 이후 중국 및 러시아의 원조 의존 - 국제적 경제관계 확장 제한 - 중국 중속 상황 탈피 가능성 부재
경제여건 악화와 제반 경제 정책의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1980~90년대) - 마이너스 성장·소비재 부족(1990년대 이후) - 극심한 식량난(1990년대 이후) - 화폐·경제개혁 실패(2000년대) - 남북한 경제교류 단절(현재) - 경제특구·북한식 경제개혁 실패(현재)

둘째, 1인 독재체제는 북한 경제가 인민경제, 제2경제(군사경제), 통치경제로 분화되어 경제력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초래했다. 통치경제는 김정은이 당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금고를 만들어 마음대로 쓰는 시스템이다. 특히 외화는 김정은이 직접 통제한다. 북한의 경제정책도 경제전문가보다는 김정은의 지시에서 출발하니 실패할 소지가 많다. 화폐개혁 등 실패한 정책은 책임자를 총살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며, 독재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계층은 경제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국가화 지속이 북한의 경제 피해를 초래했으며, 선군정치가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지만 인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 및 핵무장 강화 시도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지속시켜 열악한 북한 경제의 미

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경제는 중국에 거의 종속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의 역동성 및 다양성이 사라지고 인민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보따리 장사 혹은 밀무역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공산권 붕괴에 따른 무역 악화 및 채무증대, 기상악화로 인한 식량난 가중, 대외투자 유입 저조로 인한 각종 특구운영 실패, 남북한 경제교류 단절 등이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폐개혁 및 긴급 경제조치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장마당이 성행하고 북한이 우려하는 시장화 및 사유화 현상이 빈발하고, 돈주(부자)의 등장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및 빈곤층의 가족해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¹²⁾

이러한 상태로 통일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북한의 모든 인프라와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2020년 기준)를 보면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는 북한 경제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국민총생산이 북한의 55배 이상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은 폐쇄적 정책과 경제체제로 인하여 첨단 기술이나 설비가 유입되지 못하였고, 아직도 우마차 및 목탄버스 등 전근대적인 교통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남북한 주민 간의 의식 및 문화수준, 그리고 경제적 차이는 통일 시기 많은 혼란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이질화 상태의 극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진전되거나 성취될 수 있는데, 그 과정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안정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 3대 중요사업은 남북한 주민의 총화에 기여하고, 북한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2) 박재훈,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정치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21-2 (2012), pp.83-89; 이현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OUGHTOPIA』 26-3 (2011), pp.39-62.

〈표 5〉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2020년 기준)¹³⁾

구분	북한(A)	남한(B)	B/A
인구(천명)	25,367	51,780	2.04
명목GNI(십억원)	34,970	1,948,020	55.7
1인당 GNI(만원)	138	3,762	27.2
경제성장률(%)	-4.5	-0.9	-
무역총액(억달러)	8.6	9,801	1139
대미환율(원/달러)	109	1,180	-
발전량(억KWh)	823	12,919	15.7
쌀·곡물생산량(만톤)	440	400	0.9
원유도입량(만배럴)	385	98,026	255
시멘트생산량(만톤)	568	5,063	8.9
철도총연장(km)	5,306	4,087	0.77
도로총연장(km)	26,199	112,977	4.3
선박보유(만톤)	102	1,453	14.2

Ⅲ. 통일유형별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1. 통일 사례와 3대 통일유형의 설정¹⁴⁾

1) 제1유형: 독일통일과 평화통일 유형

독일 통일은 분단 이후 치밀하게 추진한 서독정부와 국민이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표 6> 서독의 분단 및 통일과정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을 요약한 내용인바, 서독의 노력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통일은 평화통일의 대표적 사례지만 통일 직전의 과정에서 독일과 동구권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1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남북한 주요 지표 비교,” (<http://ecos.bok.or.kr>, 검색일: 2021년 8월 14일).

14) 다양한 원인의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전제한 무력통일과 함께 남북한이 합의하는 통일 등 다양한 평화통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지웅,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융합통일의 제기」, 『북한연구학회보』 6-2 (2002), pp.98-107.

긴장에 휩싸여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서독과 함께 동독에는 소련의 위성정권이 들어섰다. 이후의 통일과정을 요약해보면 핵심적인 요소로서 서독의 경제력과 이에 기반한 외교력, 동방정책 추진과 통일에 대한 집념, 동독 주민의 선택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동구권의 몰락과 고르바초프의 등장, 동독경제의 붕괴, 탈냉전의 기류 등이 작용되었다.

<표 6> 서독의 분단 및 통일과정

구분	주요 내용
분단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독일의 항복 이후 전승국 4개국이 분할통치 결정 *서측: 미국 등 서방, 동측: 소련 - 독일연방공화국(서독, 1949년), 독일민주공화국(동독, 1949년)
통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란트의 동방정책 구상: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1972년) - 독소불가침조약 체결(1970년) - 1980년대 고르바초프 개혁정책 이후 동독 경제 급속 약화 - 1989년 6월, 동독주민 대규모 탈주 시작, 베를린 장벽 붕괴 - 대규모 시위 지속, 동독 내 개혁 내각 출범, 공산당 약화 - 동서독 간 통일논의: 포괄적 조약공동체 마련, 정상회담 진행 -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 대연합정부 탄생 - 콜 수상, 전승 4개국 및 관련국 외교로 통일 추진 여건 마련 - 8월 31일 양국 정부 통일조약 서명, 10월 3일 통일

첫째, 1969년에 집권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통일구상을 마련하였는데, 독일 민족의 공동체식 확산, 동독과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동·서독 기본조약’을 1972년에 체결하였다. 1981년에는 이주협정을 체결하여 약 15년간 1천만 여 명이 상호 방문하였고, 약 3만 명 이상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동시에 우편, 문화, 언론 및 방송교류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1980년대에 들어 동독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동구권의 경제가 붕괴되자 동구권 국가의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는 코메콘(COMECON) 그룹 내의 교역체계가 와해되었고, 동독도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의 생활고가 심

해졌다. 이는 1989년 이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등을 통한 동독주민의 대탈주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대규모 민주화 시위 등으로 이어졌다. 셋째, 동독주민의 민주화 및 개혁 의지는 동독 지도부 내 강경보수파 및 공산당 퇴진과 개혁 내각 출범을 이루어 냈으며, 1990년 1월 슈타지(STASI) 해체, 1990년 3월 18일 총선 실시와 통일 우호적인 대연합정부의 출범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넷째, 서독의 통일외교는 연방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10개 항¹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소련의 저항, 주변국들과의 국경선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에 잔류여부, 그리고 통일독일군의 위상 등의 쟁점을 전승 4개국과 동서독이 참가하는 4+2 회담과 막대한 자금력¹⁶⁾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 통일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과도 같다. 한반도에서는 동방정책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성과가 인적교류나 신뢰구축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주변국 상황은 미중 패권경쟁과 한미일 및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신냉전이 지속될 조짐이다. 북한의 핵무장 이후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과 북핵 해결에 소극적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상정하여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을 분석하는 것이 성급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 방식이며, 독일 통일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어서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

15) ①對동독 의료 및 재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②통신망 확충 및 고속전철 부설 등 환경개선 지원, ③동독의 자유총선거 실시 및 정치범 석방, 시장경제 도입, ④모드로우 동독수상의 조약공동체 체결제안 수락, ⑤양독 간 연합체 형성 및 이를 기초로 한 연방 구축, ⑥통독문제는 유럽 통합 및 동서독 관계개선과 연계 추진, ⑦동독 및 동구국가에 EC문화 개방, ⑧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전 유럽공동체 구상의 핵심기구로 인정, ⑨광범위하고 신속한 군축 및 군비통제 노력 강화, ⑩동독 및 유럽 안보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등.

16) 독일은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에 대해 유지비, 철수비, 재교육 및 주택비 등의 명목으로 120억 마르크를 제공하였음.

2) 제2유형: 예멘의 합의/무력통일 반복과 급변사태 통일 유형

예멘은 16세기 초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제국에 정복당한 이후 인접국들의 침공으로 부족국가 형태를 유지하였고, 인도 진출을 도모하던 영국이 중간 거점으로 예멘 남부지역을 노려 1893년 중심지인 아덴을 점령하였다. 예멘은 식민지국으로 1차 세계대전까지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고 북예멘에는 야흐야 이맘에 의한 왕정국가 출범, 1962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예멘공화국 선포한 이후 왕정세력 간에 내전 돌입, 내전에 소련과 사우디 등 외세 개입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왕정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나 쿠데타 및 암살 등이 반복되는 정세불안이 지속되었다. 남예멘에서는 민족해방전선 중심의 대영 독립투쟁이 지속되다가 1967년 영국이 정권을 이양하였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남북예멘 정부의 모습은 북예멘이 봉건적 족장체제 위에 군사정권의 형태이며, 남예멘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일당체제로서 체제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예멘은 상호 극심한 체제전쟁을 벌였는데, 1972년과 1979년에 각각의 전복세력과 연대한 전면전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였다.

예멘의 통일 논의는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개혁 등에 의한 경제적 압박, 남예멘에서의 원유 발견, 각각의 정치 불안과 외부 의존도 극복 필요성 등 복잡한 계산에 의해 시작되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공동 석유개발, 양국 국방비 절감, 경제개발 등 경제문제 해결이었다. 1988년 5월 남예멘의 아타스 대통령이 북예멘의 수도 사나를 방문하여 남북예멘 사이의 공동 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을 계기로 대화가 진전되었고, 1989년 3월 아덴에서 ‘경제협력 및 경제개발, 연방이 아닌 1對1의 완전한 통일 합의, 통일 이후 통일헌법 제정 및 총선거 실시’를 포함한 통일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 5월 20일 북예멘의 부족세력(자치권 상실 우려)과 남예멘의 모슬림형제단(통일헌법과 이슬람법 불일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990년 5월 20일 통일을 선포하였다.

〈표 7〉 예멘의 분단 및 통일 반복과정

구분	주요 내용
분단 과정	- 19세기 후반 오스만투르크(북)-영국(남) 치하로 분열 - 북예멘: 토착 족장 → 군사쿠데타로 독재국가 설립 - 남예멘: 아랍민족주의 영국 배척 → 사회주의 국가 출범
1차 통일 추진과정	- 남북예멘 공히 권력투쟁·외세개입으로 정치 불안 가중 - 통일의 당위성, 국방비 절감, 유전개발 등 동력 작동 - 내부 반대세력 존재 불구, 1990년 5월 1:1 통일 선포
재분열 과정	- 통일 이후 정부·군사조직 비대화 초래, 정치적 불안 심화 - 유전 개발 실패, 실업률 급증, 남북예멘 간 문화 충돌
무력충돌/ 2차 통일과정	- 1994년 남북예멘 간 무력충돌 등 내전 발생, 남예멘 이탈 - 북예멘군이 남진, 약 10주간의 전쟁 후 남예멘 함락, 통일

예멘의 불완전한 통합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바, 정부조직 비대 및 일관성 결여, 군의 단일화 불가 및 명령체계 혼란, 2개의 화폐 사용, 이라크전으로 석유수입 및 경제원조 중단, 실업률 급증, 2개 체제의 충돌(북의 가부장적 분위기와 남의 자유로움) 등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외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예멘군이 충돌하여 1994년 5월 4일 내전으로 발전했으며, 5월 21일 남예멘이 분리독립을 선언한 이후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북예멘군이 남진을 강행,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였다.

예멘 통일은 급변사태의 단계 중 김정은 사망 등 급변사태 이후 새롭게 출범한 북한의 지도부와 통일을 추진할 때의 상황을 일깨워 준다. 즉, 불완전한 통일 논의는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군벌의 저항과 같은 갈등과 무력충돌을 수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세의 개입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무장세력 등 반정부 세력이 부패한 군인과 무기력한 정부에 대해 공세적으로 국가전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안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통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다.

3) 제3유형 : 베트남 전쟁과 무력 통일 유형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을 달성하기까지 천 년의 중국지배와 근대의 프랑스 침탈, 미국 및 한국군과의 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1858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지배는 프랑스 총독과 황제가 명목상 공존하는 것 같았으나 잔혹한 식민지배의 전형이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황제의 은밀한 명으로 계속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와 호치민이 지도자가 된 월맹이 주도하게 되었다. 분단 직전의 과정을 보면 중일전쟁 기간 중 1940년 일본의 베트남 점령 통치와 1945년 프랑스군 축출,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베트남이 독립한 이후 북부는 중국군 진입, 남부에는 영국이 진입하였다. 이후 1945년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프랑스가 다시금 베트남 남부에 진출하면서 프랑스 간 전쟁이 발발하였고, 게릴라전으로 베트남군이 프랑스군에 승리하면서 1954년 7월 제네바 휴전협정¹⁷⁾이 체결되었고, 남북분단과 프랑스군 철군 등이 이루어졌다.

<표 8> 베트남의 분단 및 무력통일과정

구분	주요 내용
분단 과정	- 1858~1889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 착취 지속 - 1890~1945년 독립 투쟁, 1945년 호치민의 독립 선언(북) - 프랑스군 남부 재진입 → 남부지역 독립전쟁 → 프랑스군 축출 - 1954년 베트남 정부(남)-월맹으로 분단
무력통일과정	- 남베트남에서 베트콩에 의한 내전 촉발 - 한미군 등 과병, 북베트남 정규군 전쟁 참여, 확전 - 1975년 베트남공화국 정권 붕괴, 무력통일

베트남의 통일은 휴전협정에서 약속된 통일선거가 무산되며 시작되었다. 남부에서는 프랑스의 공백을 미국이 채웠는데, 1956년 10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응오 딘 지엠의 친미 정권인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

17) 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호치민의 베트남민주공화국이 통치, ② 남쪽은 바오다이 황제의 베트남 왕국이 통치, ③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철수, ④ 1956년 7월 총선거 실시 및 통일정부 구성.

었다. 1956년 7월의 통일 선거 실패 이후 호치민은 지하 게릴라전을 위주로 한 내전을 일으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고, 남부 산악지대를 베트콩이 장악하였으며,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내전형태의 베트남 전쟁은 1964년 8월 베트남 북부군 해군이 미 구축함을 어뢰로 공격한 통킹만사건을 계기로 미군과 베트남 북부 정규군이 맞붙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미군의 대대적 소모전에 대항했던 열악한 호치민 군은 지연전술로 버텼다. 1968년 1월 ‘철연휴’ 대공세로 승기를 잡은 호치민 군은 미국 내 반전 분위기와 1973년 1월의 파리평화협정 이후 미군의 감축 시기와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1975년 4월 30일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전과 더불어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과 게릴라전, 소련과 중국의 연대를 통한 집요한 전쟁방식을 보여준 사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살상과 파괴의 상처가 심각함을 일깨워준다. 무력통일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더라도 양측의 적대감과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은 제2의 6·25전쟁이 제한전이 아닌 세계대전 혹은 핵전으로 비화될 위험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3대 중요사업 관점에서도 최악의 환경으로 인식된다.

2. 통일유형별 통일 한국 상황과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1) 평화통일 유형¹⁸⁾

18) 안성찬, 「독일통일 30년: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내적 통일, 머릿속의 장벽 논쟁의 배경과 실상에 대한 일고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47 (2020), pp.90-107; 성장환, 「독일통일 사례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국초등도덕학회』 (2015), pp.146-159; 김현정,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이마인사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4-6 (2020), pp.186-198; 김정호,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 동독경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7-1, pp.3-16.

본고에서 통일유형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최악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표 9> 통일유형별 상황 및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전망'에서와 같이 통일유형별로 대내외 안보, 경제 상황, 사회 안정, 접경지역 안정, 남북한 주민 화합 등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 유형인 평화통일 유형은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인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통일에 동의하고, 핵을 비롯한 북한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를 전제한다. 따라서 국경의 안정과 국내의 치안확보도 완료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분야에서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 인프라 및 산업시설 재편, 주택 건설 및 현대화, 제조업 시설 건설, 실업문제 해결, 재해방지 대책강구, 인민군 해체에 따른 제대군인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사회 복지 및 의료혜택 제도 구축 등 천문학적인 통일비용(통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¹⁹⁾ 사회적 측면에서는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주민의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 남북주민 간 계층화 및 갈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나 북한주민의 근면성과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에 의해 점차 해결될 것이다. 또한 문화나 의식,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사회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나, 방송 및 인터넷 시설과 기기의 보급이 남북한 주민의 동화를 촉진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가장 주목되는 곳이 접경지역이다. 6·25전쟁 시 북한주민 115만 명(약 11%)이 남하한 것을 감안할 때,²⁰⁾ 북한주민의 대규모(현재 인구로

19) 독일이 통일 이후 10년간 지출한 통일비용이 3,060조 원이며, 정부에서 추정된 내 용은 한국의 경우 급변사태 시 30년 동안 약 2,525조, 점진적 개방을 거친 평화통일 시 379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녕, 「통일세와 통일비용」, 『동북아연구』 25-1 (2010), pp.56-61.

20) 정성호 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1999), pp.25-26.

추산하면 279만 여명) 남쪽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²¹⁾에서 경제 및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접경지역에서의 대처가 중요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접경지역이 통일의 중심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표 9> 통일유형별 상황 및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전망

○ 양호, △ 보통, × 심각

구분		평화통일	급변사태 후 통일	무력통일
대내외 안보		○	△	△
경제 상황		△	×	×
사회 안정		△	×	×
접경지역 안정		△	×	×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구호자선사업	△	×	×
	사회복지사업	△	△	×
	교육사업	△	△	×

3대 중요사업 측면에서는 계획의 기대효과 달성과 안정적 추진정도를 추진 여건의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바, 사업의 영역을 북한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전제를 할 때, 평양이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구호 및 복지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소요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의 성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시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정부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정부차원의 재원 지원은 제한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분야가 구호자선사업이나 자칫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나 통일 초기에는 제도나 방향성의 제시가 부재하여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1) 김은하 외, 「통일 후 남하하는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통일주거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0), pp.501-502.

2) 급변사태 후 통일 유형²²⁾

급변사태는 예멘통일과 같이 통일 상황이 급조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어느 일방의 무력이 작용하여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는 상태인바,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유고나 정권 탈취 등에 의해 붕괴되어 무정부상태에 이르거나 불안정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내전이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대규모 탈북, 군벌의 준동과 지역장악,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탈취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개입이다. 북한지역은 리더십 공백에 따라 혼란상태가 지속되며 무장세력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극도의 불안상태가 조성될 수 있으며,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군에게 북한 진입과 통제권을 부여한다면 통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반도 상황을 진단해 보면 안보상황은 국경의 불안정²³⁾, 무장세력과 핵심 노동당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의 저항 등에 의해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²⁴⁾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내전 후유증 여하에 따라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류 및 식량과 기본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주민생활이 불안하고 각종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또한 급변사태 시 우려되는 대규모 탈북은 접경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에서 탈북민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난민 수준의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22) 조상현, 「예멘 내전과 남북한 통일교훈 분석: 통합유형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31-2 (2012), pp.49-78.

23) 통일한국은 한중 간 1,360km, 한러 간 17.2km의 접경이 생기고 영토와 영해 및 영공이 2배 이상 확장되며, 중국 및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24) 급변사태 및 전면전 이후 잔존한 북한군은 북한 도피 정권의 지시 하에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북한주민의 협력을 막기 위하여 선전선동을 통한 공포감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을 분석해보면 긴급한 구호자선사업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지역의 치안도 불안정하고 이동로 확보도 원활하지 못하여 초기에는 북쪽으로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3개 유형 중 급변사태 후 통일이 상황관리 및 대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도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능동적이면서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은 급변사태의 후유증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무력통일 유형²⁵⁾

한반도 무력통일은 남북한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상당한 인명 손상을 초래하므로 통일 이후 통일비용과 전쟁복구비용이 소요되며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균열이 심각하여 상처를 봉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인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 유형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등이 개입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국경불안이 지속되며,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피한 잔존세력에 의한 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원활한 처리도 중요하다.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저항세력이 한동안 사회불안을 조성할 것이며 북한주민이 유보적인 태도로 관망함에 따라 실질적인 통일까지 지속적인 통합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상황은 최악의 상태에서 전쟁 복구와 함께 주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이다. 통일정부는 북한지역의 장마당, 밀무역과 지하경제 통제, 그리

25) 배정호, 「베트남전쟁의 통일전선전술과 교훈」, 『전략연구』 81 (2020), pp.13-27;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남부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주민의 대응과 그 변용」, 『아세아연구』 50-3 (2007), pp.41-59.

고 잔존하는 무기 회수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남한 지역도 전쟁 후유증이 심각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3대 중요사업의 추진여건도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남한지역의 상태와 복구 재원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순위를 따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무력통일은 급변사태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지만 구호자선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더불어 수많은 부상자, 전쟁고아 등이 발생하고 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봉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동화교육 역시 시급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비록 모든 것이 붕괴되어 여건은 불비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방안을 부단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통일 시기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1. 유엔난민기구(UNHCR) 모델

본고에서는 북한지역에서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엔난민기구(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가 안정된 지역에서부터 심각한 분쟁지역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운영방식, 전문가 양성, 자원조달, 물류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여 연구 모델로 삼았다. 이밖에도 전 세계에는 분쟁이나 재해에서 생겨난 난민을 대상으로 구호하거나 교육하는 국제기구나 NGO 등이 다양하게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와 세이브더칠드런, 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월드비전, 굿피플, 굿네이버스, 월드투게더 등이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구호를 선도하는 입장이다. 유엔난민기구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발생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임명한 고등관무관부터 시작되어 1949년 12월 유엔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국제기구로 출범하여 난민의 보호와 영구적 정착 등을 돕고 있다. 이 기구에는 총 94개 회원국과 76개의 집행위원회 회원국이 있으며, 만 여 명의 직원이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 및 130여 개 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²⁶⁾

〈표 10〉 유엔난민기구 활동체계와 2020년 성과

활동 분야	세부 사업	2020년 성과
기본권 보호	난민 등록	9,200,000명
	난민 신청	115,800건
	국적 취득	63,200명
	아동 보호	45,974건
생명을 구하는 대응	긴급구호/ 구호물품	600,000명 이상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6억 9,500만 달러
	임시 거처	249,000명
	의료	5세 미만 사망률: 0.19%
	식량과 영양	영양실조 비율: 61%
더 나은 미래건설	물과 위생	안전한 물 확보 비율: 43%
	교육	초중고 1,877,087명
	재정착	22,800건
	에너지/ 환경보호	전기공급 1,700,000명

유엔난민기구는 ‘〈표 10〉 유엔난민기구 활동체계와 2020년 성과’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권 보호, 생명을 구하는 대응, 더 나은 미래건설 등 3개 축으로 목표를 정하고 각각의 세부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본권 보호에는 등록, 난민신청, 국적취

26) UNHCR(<https://www.unhcr.or.kr/unhcr/html/>, 검색일: 2021년 8월 19일).

득, 아동보호 업무가 있고, 생명을 구하는 대응에는 긴급구호와 구호 물품 지급, 현금과 생계비 보조, 임시거처 마련, 의료, 식량과 영양, 물과 위생 업무가 있으며, 더 나은 미래건설에는 교육, 재정착, 에너지와 환경보호 업무가 있다.²⁷⁾ 이러한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난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긴급구호 활동이 있는데, 수 백 명의 전문요원을 대기시켜 상황마다 인원을 현장에 보내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바, 주요 업무는 항공·해상·도로 수송, 텐트·방수포·태양광램프·조리도구·담요물통·수면매트·모기장 등의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구호 물품 등 각종 장비 및 물품은 중간지역별로 거점화된 물류창고를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광범위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기준 47억 3,60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민간·유엔기금 및 정부 간 기구 후원금 99%, 유엔분담금 1%로 충당한다.²⁸⁾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상황은 통일시기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앞에서 통일유형별 3대 중요사업 여건을 분석한바 평화통일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성분계층이 낮은 주민과 오지의 주민의 생활은 최악이며 주민의 대량 남하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급변사태와 전쟁 이후의 통일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파괴해지고 외세의 간섭과 더불어 자원이 극도로 고갈되어 남북한 주민의 갈등도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 모델 연구에서 도출된 다음의 교훈에 의해 방안을 수립할 필

27) UNHCR, 『UNHCR Global Report 2020 연례보고서』, pp.12-13
(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1Q2_2020_AnnualReport_Korean.pdf,
검색일: 2021년 8월 19일).

28) 같은 책, p.24, pp.36-37.

요가 있다. 첫째, 정신적인 무장과 교육훈련 및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표준적 조직이 구성되고 핵심과업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이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고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창고와 수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내외부의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포괄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기획서 혹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요도나 시급성을 따져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일시기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3대 중요사업은 통일시기에도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향후 이 같은 주제가 먼 미래 혹은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좌시되기보다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대비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접근과 함께 관련 연구와 논의가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될 필요가 있다. ‘<표 11>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과제 목록(안)’은 통일에 대비하여 중단 차원에서 3대 중요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과제를 정리한 내용이다.

1)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 체계 구축

통일에 대비하여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공개하지는 않지만) 북한지역에서의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만큼 중대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11>에서는 3대 중요사업 체계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쟁점은 통일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일을 시작하

능가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 혹은 부서별로 임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때부터 관련 업무의 출발점으로 작동한다. 담당부서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계획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지역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지역은 평양직할시, 나선·남포·개성특별시와 9개도, 25개 시, 144개 군, 34개 구역, 2개 구, 144개 읍, 1,208개 동, 3,008개 리, 282개 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보다 1.23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논밭은 15.5%에 지나지 않아 항상 식량이 부족한 상태다. 인구의 74%가 도시에 몰려 있다.²⁹⁾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소요 파악과 거점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최소한 평양을 비롯한 특별시와 25개 시 및 144개 군에 대한 제반 현황과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 활동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용의 소요를 판단하고 통일비용을 축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7월까지 총 15조 3,917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운영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³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의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가용한 전문 인력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은 분쟁지역화 될 소지가 있는바, 공무원 및 군인 수준의 정신력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엄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숙지하고 필요시 정부 및 해외 전문단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업무담당자의 사업 경험도 중요하므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29) KOSIS(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 dex.do?menuId=M_02_02&vwcd=MT_BUKHAN&outLink=Y&entrType=#content-group,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30) 통일부, “주요사업: 남북협력기금,”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 erkoreanfund/intro/>,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표 11>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과제 목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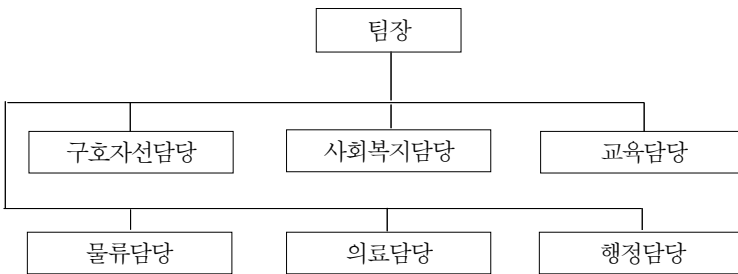
분야	세부 과제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체계 수립(직위 및 임무) - 사전연구 및 기획 추진 - 통일유형별 예상 상황 진단 - 북한지역 탐색 및 연구 - 3대 중요사업별 집중 업무 식별 - 종단의 북한지역 진출 계획과 연동 - 예상 소요 추정(통일비용 축적) - 가용 재원 및 전문 인력 현황 파악
실행 대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진출 및 지원 거점 - 물류 및 소요 경비 확충 방안 -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 팀 편성 및 운용 규모 - 행정지원 및 안전 확보 방안 - 정부 및 유엔과 NGO 협력 체제 - 대내외 홍보체제 - 수송 및 남북 연락체계 ※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가칭) 매뉴얼 작성

2) 실행 대비 검토사항

실행대비 검토사항은 통일시기에 임박하여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일들로서 미리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북한 진출지역 및 최북단 혹은 접경지역의 어느 곳에 거점을 설치할 것인가이다. 앞서 북한 지역에 대한 탐색 및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는데, 본 고에서는 핵심지역인 평양과 동서해 대표도시 각 1곳 및 국경지역인 신의주가 북한의 활동거점으로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접경 지역은 대진대학교와 금강산토성수련도장이 전진기지로서 검토가 필요한데, 지역적으로 물류 및 인력의 과전을 통제하는 중간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청년계층을 선발하여 유엔난민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에 보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지역에서의 현장교육 및 훈련은 최근의 기술인 3D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가상의 meta와 현실세계의 universe의 합성어로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북한지역에서 초기단계에 활동할 표준적 규모의 팀 편성은 유엔난민기구의 업무체계를 참고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복합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팀장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북한지역 활동 팀 편성도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 팀 편성도다. 3대 중요사업 전문팀과 함께 물류 및 의무 전담팀이 있고, 안전을 포함하여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거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담당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팀을 몇 개 운용할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림 1> 북한지역 활동 팀 편성도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한 권의 기획서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어렵지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고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매뉴얼에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가칭)’ 제목 하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

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과전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북한 주요지역 특징(첨부), 중장기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V. 결론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은 포덕·교화·수도공부와 더불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연간 예산의 70%를 활용함으로써, 종단의 발전과 사회적 공신력 확보 및 덕화선양에 공헌하여 왔다. 3대 중요사업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부터 통일 이후까지도 부단히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에 기반한 인존사상의 실천과 기아와 공핍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통일 시기 3대 중요사업의 추진은 많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3가지 통일사례를 이론적 근거로 삼았는바, 독일의 평화통일 유형, 예멘의 급변사태 후 무력통일유형, 그리고 베트남의 무력통일 유형이다. 3대 중요사업 추진여건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피폐한 경제여건과 현격한 남북한의 국력 차를 감안해볼 때 3가지 통일유형 공히 상당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은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시급한 구호와 의료 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 소요가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북한지역에서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엔 난민기구의 모델을 참고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

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통일시기가 도래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반드시 추진한다고 전제할 때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데,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관련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고 통일 이후 종단의 업무 수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고경민, 「남북한의 정책 선택과 통일시나리오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74, 2015. <http://uci.or.kr/G704-001454.2015.20.1.014>
- 김강녕, 「통일세와 통일비용」, 『동북아연구』 25-1, 2010. <https://doi.org/10.18013/jnar.2010.25.1.003>
- 김동성, 「민족과 통일의 미래」, 『전략연구』 41, 2007.
- 김은하 외, 「통일 후 남하하는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통일주거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0.
- 김정호,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 동독경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1, 2011.
- 김현정,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계마인사프트 복원」, 『한국과국제사회』 4-6, 2020.
- 박제훈,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 전망: 정치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21-2, 2012. <https://doi.org/10.23014/kace.21.2.201412.79>
- 박종수,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https://doi.org/10.25050/jdaos.2014.24.1.291>
- 배정호, 「베트남전쟁의 통일전선전술과 교훈」, 『전략연구』 81, 2020. <https://doi.org/10.46226/jss.2020.07.27.1.7>
- 안성찬, 「독일통일 30년: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내적 통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47, 2020. <https://doi.org/10.31302/KGDaF.47.4>
-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24-2, 2015. <http://uci.or.kr/G704-001526.2015.24.2.007>
-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남부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주민의 대응과 그 변용」, 『아세아연구』 50-3, 2007. <http://uci.or.kr/G704-000745.2007.50.3.008>

- 이항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http://uci.or.kr/G704-SER000013278.1998.4..006>
- 이현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OUGHTOPIA』 26-3,
2011. <http://uci.or.kr/G704-SER000012878.2011.26.3.004>
- 정성호 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1999.
- 정지웅, 「한반도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융합통일의 제기」, 『북한연구학회
보』 6-2, 2002.
- 조상현, 「예멘 내전과 남북한 통일교훈 분석: 통합유형을 중심으로」, 『중동
연구』 31-2, 2012. <http://uci.or.kr/G704-001570.2012.31.2.001>
- UNHCR, 『UNHCR Global Report 2020 연례보고서』, 2020.

■ Abstract

**Research on the Measures and Driving Force behind
the Three Major Works of Daesoon Jinrihoe in North
Korea in Case of the Respective Type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rk Young-taek

Professor, Unification Graduate School, Daejin University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centers on how to promote Three Major Works of Daesoon Jinrihoe, charity aid,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projects, during the unification period. Determining the best methods of promotion is crucial because the Three Major Works must be carried out after unification, and the works must remain based on the practice of the philosophy of Haewon-sangsaeng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The idea of Haewon-sangsaeng is in line with the preface of the U.N. Charter and the aim of world peace. North Korean residents are suffering from starvation under their devastated economy, which is certain to face a crisis of materialistic deficiency during reunification.

In this study, the peaceful unification of Germany, unification under a period of sudden changes in Yemen, and the militarized unification of Vietnam were taken as case studies to diagnose and

analyze the conditions which would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Major Works. These three styles of unification commonly required a considerable budget and other forms of support to carry out the Three Major Works. Especially if unification were to occur after a period of sudden changes, this would require solutions to issues of food, shelter, and medical support due to the loss of numerous lives and the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UNHCR model was analyzed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of expanding mental well prepared and sufficiently qualified professionals, reorganizing standard organizations within complex situations, task direction, preparing sufficient relief goods, budgeting, securing bases in border areas with North Korea, and establishing networks for sponsorship. Based on this, eight detailed tasks in the field of system construction could be used by the operators of the Three Major Works to prepare for unification. Additionally, nine tasks for review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timing of unific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onclusion, in the event of unification, the Three Major Works should not be neglect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manual “Three Major Works during the Unification Period” should include strategic points on organizational formation and mission implementation, forward base and base operation, security and logistics preparation, public relations and external cooperation, safety measures, and transportation and contact systems.

Keywords: Three Major Works, Haewon-sangsaeng, unification types, UNHCR, unification professionals

논문투고일 : 2021.09.27. 심사완료일 : 2021.11.16. 게재확정일 : 2021.12.09.